

AI 가짜광고 확산…‘의사·환자’ 섞어 소비자 혼혹

디지털 서투른 노년층 중심 피해…고액 결제 속출
식약처 허위광고 16곳 적발…84억 규모 강제 차단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씨(76)는 지난 10월 유튜브에서 접한 한 광고 영상을 보고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했다. 영상에는 노인이 등장해 해당 제품을 섭취한 뒤 건강을 되찾았다는 체험담을 전했고, A씨는 이를 살펴 인물의 인터뷰로 밝혔다. A씨가 의약품으로 알고 구입한 이 제품은 15일 분량에 39만원으로, 하루 약 2만 6000원에 달하는 고가였다. 그러나 복용 방법이나 성분 표시 등 의약품에 필수적 으로 포함돼야 할 정보가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A씨는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 식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짜 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식·의약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 2022년 5만8578건, 2023년 5만90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가 2024년에는 9만6726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AI를 활용한 광고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실태는 정부 점검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식약처는 이날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식품을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 해당 계시물은 모두 접속 차단됐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인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행위를 보면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5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일반식품을 ‘염증성

자방부터 면역 능력’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업체도 3곳 적발됐다. 이밖에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준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도 4곳에 달했다.

일반식품을 실제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한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비만치료제 ‘외고비’, ADHD 치료제 ‘콘서타’,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

실제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전문가 발언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허위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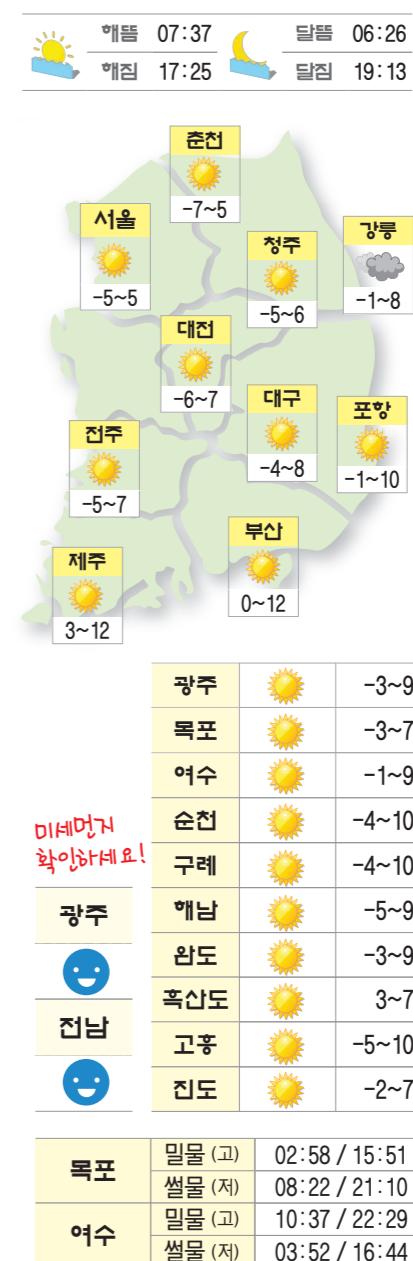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최근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AI로 제작·편집된 영상이나 이미지에는 반드시 AI 생성몰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식·의약품 관련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내 신속 심의를 추진하고, 피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심의 이전이라도 긴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겠다”며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웅 인턴기자 djawody@031@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늘의 날씨



광주시교육청 ‘다양한 실력’ 비전 제시

내년 4대 중점영역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를 비전으로 2026년 광주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교장과 주요 기관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정책과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광주교육이 추진해온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핵심 사업을 학교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교육안전·맞춤형 성장·행복공동체’ 3대 축을 중심으로 ‘기본교육’을 새로운 교육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4대 중점영역과 16대 중점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광주교육 4대 중점영역은 △다양한 실력 △미래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이다.

‘다양한 실력’ 강화를 위해 다양성을 반영한 수업을 확대하고, 독서·인문학 교육과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을 강화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은 중등학교까지 확대되며, ‘광주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도 운영된다.

‘미래인성’ 영역에서는 학교 인권 강화와 교육공동체 마음건강 지원을 추진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민원면담실을 구축한다. 교육활동 참여에 대응하기 위



이정선 교육감이 ‘2026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한 ‘위기교실 케어샘’을 운영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다정다감 프로젝트’와 ‘학생 사이버 방범단’을 도입한다.

‘글로벌 기반 세계로’ 영역에서는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고, 5·18 광주정신 세계화와 K-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글리세포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주 배경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협력교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디지털 기반 미래로’ 영역에서는 AI 중심 미래교육과 수학·과학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전국 최초 AI 전담 교육기관인 ‘광주시교육청 AI 교육원’을 내년 1월 개원하고, 지능형 과학실 구축과 과학 중점 주간 확대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기본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폐려다임을 전환하고, 모든 아이가 자신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



무안 양배추 수확작업 현장 19일 전남 무안군 협경면의 한 양배추밭에서 농민들이 수확작업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무안 양배추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12·29 유가족, 진상규명 촉구 전국 버스 순회

참사 피해자 네트워크 강화·연대…현장 추모도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전국 참사 현장을 순회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9~22일 전국을 순회하는 ‘진실과 연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고 21일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기본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폐려다임을 전환하고, 모든 아이가 자신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

난 피해자 원탁회의’를 열고, 전국적인 재난 피해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무안 국제공항으로 향한다.

유가족협의회는 “전국 각지의 재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이 겪는 고립된 슬픔을 사회적인 연대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라면서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참사일지라도 그 아픔의 본질과 국가의 부재라는 공통된 경험을 확인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실질적인 동력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윤성 기자 yo1404@

왜 내 강아지 학대해

○…자신의 반려 동물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흥기를 훼두른 중국인 이 경찰에 체포.

광주 광산경찰은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중국인 B씨를 검거.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50대 중국인 B씨를 흥기로 찌른 혐의.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B씨가 학대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돼.

두 사람은 건설 노동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서로 집을 자주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A씨는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강아지가 피를 흘리고 있자 B씨의 소행이라고 판단, 실랑이를 벌이다 이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B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수술을 받고 현재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B씨가 A씨의 강아지를 학대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

정보과 다시 현장으로…광주경찰 조직개편 ‘윤곽’



경찰청이 지난해 축소·통폐합했던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다시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광주청 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각종 지역 현안 대응 과정에서 기존 시·도청 중심 광역정보 체계의 한계를 확인하고, 정보 기능을 다시 민생 현장으

로 돌리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전국 261개 경찰서에 정보과 또는 정보 계 조직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시·도 경찰청 소속 광역정보팀은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 크다.

이는 정치 관여와 사찰 논란 등으로 축소된 정보 기능을 다시 강화하되, 범죄첩보 수집과 지역 동향 파악, 정책 참고 용 정보 생산 등 순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 역시 변화가 시가 경찰 20여

광역정보 폐지…동부·남부서 정보과·외사계 복원

민생치안·범죄수사 중심…1월 윤곽·3월 시행 유력

사·형사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 중심이던 인력 구조를 민생 치안과 범죄 수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향성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과와 환원과 외사 기능 복원은 기정사실에 가깝다”며 “다면 인사 문제와 맞물려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 3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조직 개편 자체는 1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